조세·재정 BRIEF

KIPF 한국조세연구원

2013. 6. 28(금)

중국의 중앙·지방재정 현황과 시사점

요 약

□ 중국은 1994년 중앙지방간 세수를 공유하는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국가 재정세입이 지방에서 공공부분으로 흡수됨으로써 전체 재정규모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규모가 전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남(=재정지출/국내총생산)

○ 1994년 분세제 개혁은 재정의 Re-Centraliz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 세입의 일정부분을 국가로 환원하는 것이었음. 이후 국가재정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수의 양성화'가 이루어진 것임

○ 이에 GDP 성장의 증가와 함께 국가재정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갖춤으로써 서서히 재정규모도 증가함. 현재의 재정지출 규모는 20~25%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국가세입 규모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20%대임

□ (중국 재정수입 증가속도 둔화) 현재 중국 재정수입은 20~30%의 고속성장에서 저성장단계로 진입한 상황임*

○ 2011년 기준 중국의 공공재정 세입 현황은 10조 3,874억위안 규모이며, 전년 대비 약 24.8%가 증가함. 2012년 12.8%, 2013년 1/4분기 6.9% 증가함. (2013년 세입예산 12조 6,630억위안, 재정적자 1.2조위안(GDP의 2%))

○ 2011년 기준 조세수입은 약 8조 9,738억위안으로 약 87% 정도가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정석규, 「중국 재정개혁의 핵심이슈와 개혁전망」, PEMNA센터 세미나 발표자료(2013. 6. 19) 인용

□ (재정지출 증가 증가추세) 반면, 재정지출 규모는 향후 민생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 빠른 속도로 증가

○ 2011년 기준 10조 9,247억위안 규모이며, 2013년 1/4분기 재정지출은 2조 7,037억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함

□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중앙+지방)도 증가추세이며, 세출부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시급한 수준

○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에서 교육 15.1%, 일반행정과 사회보장이 10%대, 의료부분 5.9%, 과학기술 3.5% 수준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 의료를 포함한 공적부조, 복지부분의 지출 비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부분 증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통계연감에 따른 주요 지출부분의 중앙과 지방의 비중을 살펴보면, 국방, 경찰, 국채 및 외채 이자상환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 지출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함

- 특히, 재분배 관련 지출로 볼 수 있는 '사회보장·고용복지' 부분의 지방정부 비중은 약 95.5%, 의료 99%, 교육 94%를 차지함. 그 밖에, 이른바 Spillover effect가 커서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교통인프라, 환경, 통상 부분 역시 지방정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세입은 주로 상급정부에 집중되는 반면, 세출의 책임은 하위정부에 있어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나타남

- '세입' 부분은 중앙정부 위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세출' 부분에 대한 개혁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재정적자 감축 및 지방재정 확충 방안) 이에 중앙정부는 다방면의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토지개발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거나 지역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보조금제도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형평화 보조금, 특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특정 보조금 이외에도 세수반환금, 세출결한 보조금 등이 있음

○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개발 후 토지 임대료를 통해 재정을 확충하는 체제를 갖춰 가고 있으며, 현재 본격적인 '재산세'를 도입하기 위해 상해 등의 일부 도시에서 재산세 모의실험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의 재정지출 구조상 향후 재정적자의 대부분은 지방정부에서 발생할 것인바, 세출분야별 재정관리 및 재정지출 부담에 대한 중장기 재정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Ⅰ 중국의 재정 및 재정제도

1. 중국 재정개혁의 핵심 이슈

□ 2012년 중국 재정부는 보도자료(中國新聞鋼 2012. 2. 20.)를 통해 '재정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고, 재정개혁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재정체제 개편

○ 일반이전지급 비율을 높이고, 특별이전지급 규모 비율을 감소시킬 계획

○ '성(省)'급 이하 재정체계를 개선해 재정을 더욱 균형적으로 배분하고, '현(縣)'급 정부의 기본보장 재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

□ 예산제도 개편

○ 정부기금예산의 규범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며 국유자본예산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보험기금 예산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정부회계 개혁을 추진하여 지방정부 채무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세수제도 개혁

○ 일부 서비스 산업관련 영업세를 증치세(增值稅: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재화와 용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소비세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세 징수범위와 세율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과 배출감축을 촉진하고자 함

○ 부동산세 개혁 경험을 토대로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환경보호세 개혁 방안을 연구하여 제정하고자 함

○ 세금이 주가 되고, 요금을 보조로 하는 원칙과 분류원칙에 따라 행정사업성 요금과 정부기금을 통폐합하고자 함

2. 중국의 정부간 재정현황 및 분세제 개혁 전후 변화

□ 중국의 정부간 재정현황

○ 중앙정부 재정수입은 총재정수입의 50%에 달하지만, 지방정부에 35%가 이전되어 15% 정도가 중앙정부의 수입에 해당

- 재정조정 이후의 지방정부 지출은 전체 공공지출의 약 85% 수준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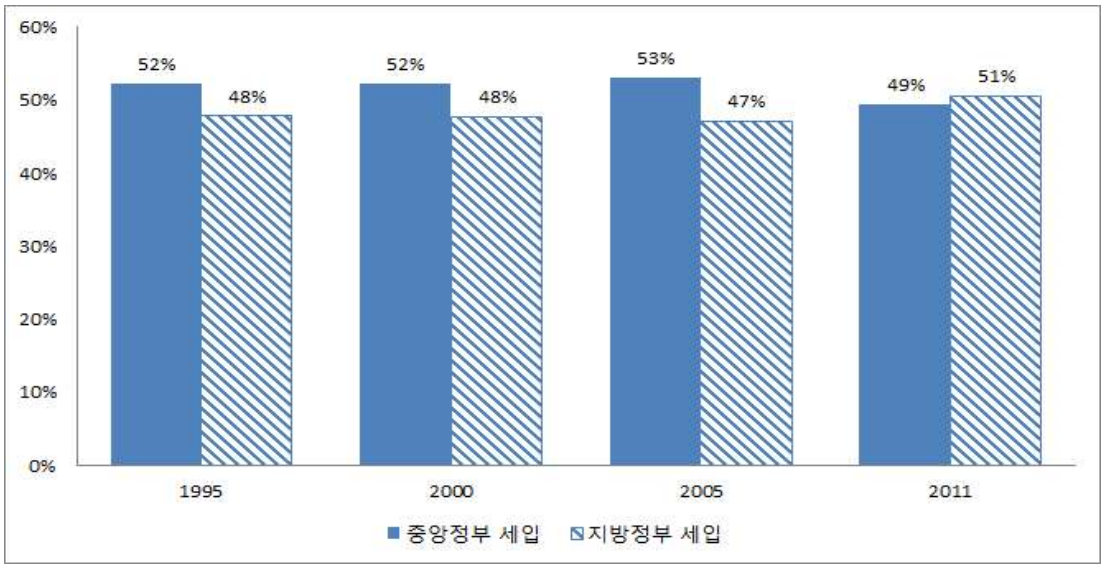
<표 Ⅰ-1> 중앙-지방의 재정수입 및 지출규모

(단위: 억위안)

재정수입	중앙 재정수입	지방 이전지급	지방 재정수입	실제 중앙지출	실제 지방지출
103,874	51,327(49.4%)	39,921	52,547(50.6%)	16,514(15.1%)	92,733(8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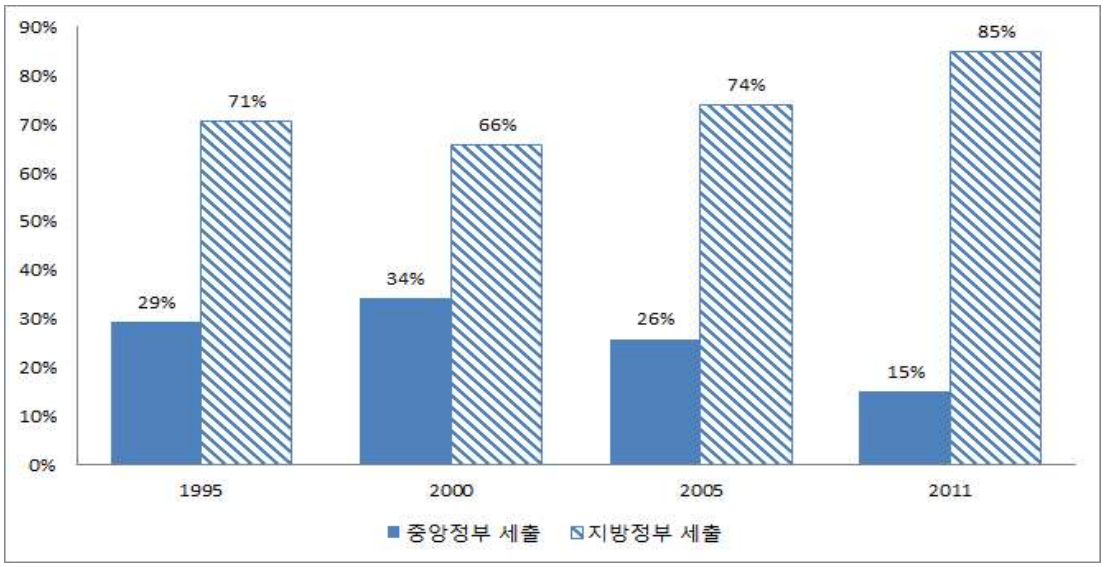
자료: 중국재정부, 2011년

[그림 Ⅰ-1] 중앙 대 지방 세입 비중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각 연도

[그림 -Ⅰ-2] 중앙 대 지방 세출 비중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각 연도

□ 1994년 분세제 개혁 전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조세수입 규모 변화

○ 중앙의 조세수입은 1993년 957억위안 대비 2,906억위안으로 약 3배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입은 3,391억위안에서 2,311억위안으로 전년 대비 약 1/3이 감소하였음

<표 Ⅰ-2> 1994년 분세제 개혁 전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세수입 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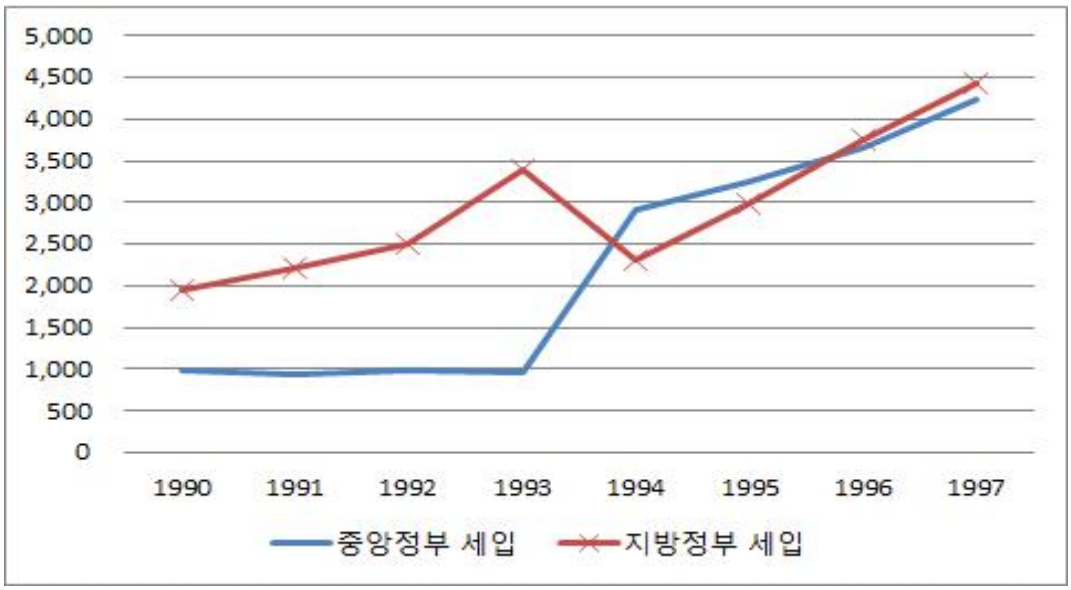
(단위: 억위안)

	조세수입		지출	
	중앙	지방	중앙	지방
1993	957.51	3,391.44	1,312.06	3,330.24
1994	2,906.50	2,311.60	1,754.43	4,038.19
1995	3,256.62	2,985.58	1,995.39	4,828.33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2

[그림 Ⅰ-3] 분세제 개혁 전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변화

(단위: 억위안)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2

Ⅱ 중국의 조세제도 및 정부간 재정

1. 중국의 국세 및 지방세제도

□ (국세 지방세 조정 및 세수공유에 해당하는 분세제 개혁의 배경과 목적)

○ 분세제 개혁: 1994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금 공유를 최적화하고, 세법 체계의 투명성과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를 목표로 하였음[1)]

○ 분세제 개혁 이전 상황: 지방정부가 정부간 계약(Fiscal Contracting)을 통해 계약상에 명시된 일정한 할당량을 중앙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었음

○ 이상과 같은 '지방정부 주도하의 세수이전(bottom-up)' 방식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중앙정부로 이전되지 않게 되는 구조임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체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예산 이외의 기금(extra budgetary funds)을 추가로 비축해 두고, 중앙으로의 이전

1) Wong, Christine P.W. Central-local Relations Revisited: The 1994 Tax-Sharing Reform and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in China. China Perspectives 31:52-63. 2000.

세율을 줄이고 지방정부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득공제를 늘려나가는 방식을 채택함(Zhang and Martinex-Vazquez, 2003)

- 따라서 1978년에서 1993년 사이에 중앙정부 예산 대비 GDP의 비율이 31%에서 12%로 급격히 줄어들게 됨(Knight and Shi, 1999)

○ 또한, 지역간 소득격차 불균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지역간 소득 불균형은 부유한 성(省)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세수이전 부분을 축소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짐

□ 중앙정부 재정권한 강화를 의미하는 분세제 개혁은 조세제도의 효율성, 징세행정의 개선, 재정건전성 및 책임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함

○ 그러나 분세제 이후, 지방재정의 재원보전 미흡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격차 심화와 같은 부정적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됨[2)]

<표 II-1> 현행 중앙-지방의 세입·지출 구분

세입	중앙 세입	관세, 소비세, 중앙기업 소득세, 지방은행 외자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소득세, 철도 은행 보험 등 집중 납부 수입, 중앙기업 납부이윤 등
	지방 세입	영업세, 지방기업 소득세, 개인소득세, 도시 토지사용세, 고정자산투자조절세, 도시 유지건설세, 방산세, 차 선박 사용세, 인화세, 도축세, 농지점용세, 계세, 토지증치세, 국유토지유상사용수입 등
	공동 세입	증치세(중앙 75% 지방 25%), 공동수입에 포함되는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중앙 60% 지방 40%), 자원세(해양 석유자원세는 중앙, 기타 자원세는 지방), 증권거래세(중앙 97%, 상하이 선전 3%)
지출	중앙 지출	국방비, 무장경찰 경비, 외교 지출, 중앙 행정관리비, 기본건설투자, 중앙기업 기술개조비, 지질탐사비, 채무이자, 농업지출, 문화 교육 위생 등 사업비 등
	지방 지출	지방행정관리비, 검사지출, 무경경비, 민병사업비, 지방기업 기술개조비용, 농업지출, 도시 유지건설비, 지방문화 교육 위생 사업비 등

자료: 정석규, 「중국 재정개혁의 핵심이슈와 개혁전망」, PEMNA 센터 세미나 발표자료 인용 (2013. 6. 19)

□ 중앙정부 세입의 주요 세목으로는 증치세, 소비세,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가 약

2) 임성일, 『중국의 재정과 조세제도(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85%를 차지함

□ (정부간 세입규모 및 비중) 2012년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 2011년도 전체 세수는 중앙정부 55%, 지방정부 45%가 배분된 것으로 나타남

<표 II-2>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규모 및 비중

(단위: 억위안, %)

세입 목록	중앙+지방	금액		비율	
		중앙	지방	중앙	지방
국내증치세	24,266.63	18,277.38	5,989.25	35.61%	11.40%
국내소비세, 수입수출관련 증치세 및 소비세	11,291.88	11,291.88	0.00	22.00%	-
영업세	13,679.00	174.56	13,504.44	0.34%	25.70%
기업소득세	16,769.64	10,023.35	6,746.29	19.53%	12.84%
개인소득세	,6054.11	3,633.07	2,421.04	7.08%	4.61%
자원세	595.87	-	595.87	-	1.13%
인화세	1,042.22	425.28	616.94	0.83%	1.17%
재산세(House Property Tax)	1,102.39	-	1,102.39	-	2.10%
그 밖의 세금	14,936.65	4,806.13	10,130.52	9.36%	19.28%
총세금	89,738.39	4,8631.65	41,106.74	54.19%	45.81%
세금 이외의 세입	14,136.04	26,95.67	11,440.37	5.25%	21.77%
총계	103,874.43	51,327.32	52,547.11	100.00%	100.00%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2

□ (재정관리의 취약성) 지방정부의 경우, 조세수입 외에 '예산외(Extra-budget)' 및 '제도외(Off-budget)' 비중이 21.77%로 중앙정부의 5.25%에 비해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함

□ ('분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 기업소득세의 경우 철도운수, 국가우정, 국유은행, 주요 국가공기업(석유, 천연

가스, 화학분야)으로부터 징수되는 세수입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기업소득세 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60%:40%의 비율로 배분됨

○ 증권거래세라고도 불리는 인화세의 전체 세수입은 중앙:지방비율이 40:60이나, 그 중 주식거래관련 세수입[3]의 97%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고 나머지 3% 세수입은 지방정부에 귀속됨[4]

2. 중국의 정부간 기능 분담 및 세입구성

□ 중앙정부재정 세입 구성

○ 중앙정부의 세입은 크게 자체수입, 이전재정수입, 채무수입, 기타수입으로 구분

○ 자체수입은 조세수입이 대부분이며, 이전재정수입은 지방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을 의미하고, 채무수입은 국채발행수입, 해외차관수입, 국내공채발행수입, 국고채권수입, 전업은행의 재정채권 매입분 등임

- 이전재정수입은 지방정부가 '증치세'와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중앙정부로 이전하는 부분임

□ 지방정부재정 세입 구성

○ 지방재정의 세입은 크게 조세수입(지방세수입, 공향세수입의 일부), 세외수입(각종 부담금, 사용료 수입 등), 이전재정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분담

○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자본투자, 건설부문의 기능을 주로 담당

○ 지방정부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운영, 기술진보, 농업, 교육, 문화, 보건, 사회복지, 공공안전, 공공기초시설, 일반행정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기능을 담당

□ (사무권한과 재정비중의 부조화) 중앙정부와 성급정부의 차원에서만 세출 세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규명하였을 뿐, 성급 이하 정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3) 주식거래 관련 인화세는 총 438.45억위안이고 중앙정부로 425.28억위안이 배분됨.
4) 임성일, 『중국의 재정과 조세제도(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두지 않고 있음[5)]

○ 세입구분은 비교적 명확하나 지출의 중복부분이 많고 책임 설정도 모호하여 그에 따른 재정지출 비효율성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세입은 상급정부에 집중되고, 세출의 책임은 하위정부가 떠맡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여, 하위정부로 갈수록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임

Ⅲ 중국의 지방재정 현황 및 제도

1. 중국의 지방재정

□ 중국의 지방재정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기준 중국의 지방재정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9%가 증가한 규모이며,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4조 1,107억위안으로 총수입의 약 78% 정도를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한편, 지방재정 지출 규모는 수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지방재정 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6%가 증가한 규모임

- 1994년 이후 세입규모와 지출규모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향후 중국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994년 분세제 개혁 이후, 지방재정 세입은 매년 9~29%가 넘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방재정 지출 규모는 1994년 이후부터 세입과 규모면에서 큰 격차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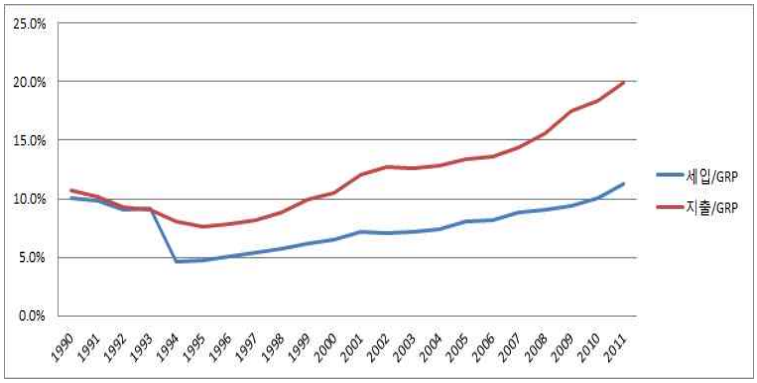
○ 지방총생산 대비 지방세입 비중을 살펴보면 1994년 이후부터 재정규모가 전체 지방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남(=지방세입/지방총생산)

○ 지방총생산 대비 지방지출 비중도 1994년 즈음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5) 장노순·김화, 「중국 재정제도개혁의 변천과 발전과제 -분세제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8집, 2009.

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지방지출/지방총생산)

[그림 III-1] 지방총생산 대비 지방 총세입과 총지출



출처: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2

□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지방)

○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에서는 기타 부분이 약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 16.7%, 사회보장이 11.4%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I-1> 2011년 지방재정 지출

(단위: 억위안)

합계	일반 행정비	국방	공공 안전	교육	과학 기술	사회 보장	의료 위생	환경 보호	三農	기타
92,734	10,085	198	5,267	15,498	1,886	10,607	6,358	2,567	9,521	30,746
100.0%	10.9%	0.2%	5.7%	16.7%	2.0%	11.4%	6.9%	2.8%	10.3%	33.2%

자료: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2

2. 중국의 이전재원 제도 현황

□ 중국정부는 중앙정부 재정수입이 확보된 이후 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이전재원제도인 보조금제도를 운영

○ 서부의 낙후지역들은 중앙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을 지원받아 재정지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 지출의 약 54.1%를 이전재원이 차지함[6)]

6) 장노순·김화, 「중국 재정제도개혁의 변천과 발전과제 -분세제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8집 1호, 2009.

□ (이전재원 도입제도 배경)

○ 1994년 분세제 개혁은 지방으로부터 중앙으로의 세수이전 확대를 의미하므로 지방정부 재정은 감소하였고, 또한 부유한 지방정부는 높은 세율을 이전하고 이로 인한 '세수반환(tax retate)'을 받게 되어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과 재정적자가 심화됨

○ 지방정부는 과세권 및 지방채 발행 권한이 없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만이 지방재정 불균등 해소와 재정보전 역할을 수행함

□ 재정이전제도는 일반보조금과 특정보조금, 기타보조금으로 구분됨

○ 일반보조금은 형평화보조금으로서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와 유사함

○ 특정보조금은 중앙정부 특정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정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한 국고보조금에 해당

□ 기타보조금으로는 '세수반환(Tax rebate)'과 '세출결한보조금(회계정산보조금)'이 있음

○ 세수반환: 1994년 분세제제도 개혁 당시 지방재정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분세제제도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자 새롭게 제정된 보조금제도로서 1993년 기준 지방에서 징수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증가액의 30%를 당해 지방정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함[7)]

○ 세출결한보조금(회계정산보조금):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예산외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정산을 한 후,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또는 지방에서 중앙으로 재정이전이 이루어지는 재정이전시스템으로 중국의 고유한 제도임[8)]

---

7) 장노순·김화, 「중국 재정제도 개혁의 변천과 발전과제 -분세제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8집 1호, 2009.

8) 임성일, 「중국의 지방재정제도」(1999) 인용

<표III-2> 보조금의 유형별 규모변화(1980~1993)

(단위: 10억위안)

	합계	세수반환	일반보조금	특별보조금
1980	14.1	7.2	5.9	1
1981	15.2	6.3	6.4	2.5
1982	19.1	7.1	6.9	5.1
1983	21.2	8.9	7.2	5.1
1984	25.4	10.2	7.8	7.4
1985	34.5	18.3	9.5	6.7
1986	46.4	25.7	8.6	12.1
1987	48.1	27.8	9.9	10.4
1988	53.8	27.3	8.2	18.3
1989	56.2	28.8	8.4	19
1990	58.5	29.6	8.6	20.3
1991	55.5	35.5	8.6	11.4
1992	59.6	37.8	10.1	11.7
1993	54.5	36	9.5	9

자료: Christine P. W. Wong(2000), op. cit., p. 52

<표 III-3> 보조금의 유형별 규모 변화 추이

(단위: %)

	GDP 대비					총보조금 대비				
	1997	1998	1999	2000	2001	1997	1998	1999	2000	2001
세수반환	2.7	2.7	2.6	2.6	2.3	70.5	62.7	53.0	48.9	38.9
일반보조금	0.3	0.3	0.5	0.9	1.4	7.5	7.5	10.2	17.9	24.5
특별보조금	0.7	1.1	1.8	1.6	2.0	18.1	26.4	33.9	30.6	34.6
고정 보조금	0.1	0.1	0.1	0.1	0.1	3.9	3.4	2.9	2.6	2.0
총 보조금	3.8	4.2	5.0	5.2	5.8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1. Ahmad, Singh and Fortuna(2004: 7).
2. 김의섭. 「중국의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변화」,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제1호(2006. 6) : 129~160. 2006.

□ 전체 보조금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약 4조 5,380억위안으로 전체 GDP 규모의 9% 내외로 명목상은 높은 수준에 해당함

○ 그러나 중국 중앙정부 이전재원의 상당부분은 지방으로부터 이전재원 받은 것을 포함하므로 이 중에서 원래 지방분은 상쇄하는 것을 감안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목상 9%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표 III-4>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지급된 보조금 추이(2002~2012)

(단위: 10억위안)

연도	세수반환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이전재원 규모	증가율
2002	736.2	
2003	824	11.9%
2004	1,037	25.8%
2005	1,147	10.6%
2006	1,349	17.6%
2007	1,811	34.24%
2008	2,294	26.7%
2009	2,862	24.7%
2010	3,234	12.9%
2011	3,989	23.3%
2012	4,538	13.7%

자료: 수치만 사용: Ministry of Finance,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 and Local Budgets", 2002~2012

□ 중앙정부 조세수입 대비 이전재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1994년 이후 이전재원 항목 내 비중 변화

○ 2011년 기준 국세수입은 8조 9,770억위안이며, 이전재원은 3조 9,890억위안으로 약 44.5% 수준의 비중임

○ 이전재원 항목별 비중에서 주목할 점은 '세수반환' 규모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임

- 1994년 개혁 당시, 전체 조세수입의 35%를 차지하던 기존 '성정부의 세입 기득권'이 2011년 5% 내외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 일반보조금, 즉 형평화보조금의 경우, 1994년 2% 내외에서 2011년 2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시에 농림수산업, 교통, 주택 등의 국고보조금 비중도 증가하고 있음
-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재정당국으로서의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 부분에 대한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3년 자료를 기준으로 지역 간(성(省)급 기준) 재정지출 대비 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잘사는 '베이징' 지역의 비중은 약 25%, '티벳' 지역은 약 90%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정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에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일반보조금 증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5> 2003년도 지역별 전체 재정지출 대비 보조금 비중

	총지출 (단위: 10억위안)	보조금 (단위: 10억위안)	재정지출 대비 보조금 비중	1인당 총지출 (단위: 위안)	1인당 보조금 (단위: 위안)
Beijing	73	18	25%	5,047	1,236
Tianjin	31	13	42%	3,087	1,286
Hebei	65	34	53%	955	502
Shanxi	42	22	53%	1,254	664
Inner Mongolia	45	27	61%	1,875	1,132
Liaoning	78	41	53%	1,863	974
Jilin	41	29	71%	1,513	1,072
Heilongjiang	56	32	57%	1,481	839
Shanghai	109	33	31%	6,164	1,869
Jiangsu	105	33	32%	1,405	442
Zhejiang	90	28	32%	1,846	577
Anhui	51	29	58%	823	471
Fujian	45	15	34%	1,292	428
Jiangxi	38	22	58%	898	517
Shandong	101	33	33%	1,108	362
Henan	72	39	55%	741	403
Hubei	54	31	58%	951	545
Hunan	57	33	58%	861	495
Guangdong	170	44	26%	1,892	491
Guangxi	44	24	55%	913	494
Hainan	11	6	57%	1,300	740
Chongqing	34	20	59%	1,219	713
Sichuan	73	41	56%	896	501
Guizhou	33	22	67%	859	568
Yunnan	59	35	60%	1342	800
Tibet	15	13	90%	5,404	4815
Shaanxi	42	25	60%	1,139	681
Gansu	30	21	70%	1,182	828
Qinghai	12	10	82%	2,285	1,873
Ningxia	11	7	67%	1,824	1,207
Xinjiang	37	24	66%	1,905	1,241
Max			90%	6,164	1,869
Min			25%	823	362
Average			54%		

출처: Jorge Martinez-Vazquez, Baoyun Qian, Shuilin Wang and Heng-Fu Zou. "A Treaties on Public Finance in China", No 555 CEMA Working Papers, China Economics and Management Academy,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 2012.; 1인당 총지출 및 1인당 보조금은 China Statistical Yearbook 2012를 기초로 산정

3. 이전재원 효과분석 결과

□ 선행연구(Shuanglin Lin, 2011)에서는 중국의 이전재원 효과를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성(省)단위를 기준으로 한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 있음[9)]

○ 1995~2004년 31개 중국 지방정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정부 간 이전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지방정부가 낮은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이전재원을 받고 있으며, 성장률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1인당 이전재원을 더 많이 받았음

- 또한, 저성장지역, 가난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소수(minority)민족 지역과 서부 지역들도 타 지역보다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이전재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형평화 보조금의 역할에 따른 낙후지역 지원 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수반환 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현행 이전재원 체계는 지역 재정격차 해소에 효과적이지 않음

○ 만성적인 지역 간 소득 및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유일한 선택은 성장자극 세수반환(rebate)제도를 폐지하고 VAT 세수의 지방정부 몫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맺음

□ 선행연구(Li Zhang and Xinye Zheng, 2011)[10)]에서는 계량분석을 통한 효과분석을 시도하였음

□ Li Zhang과 Xinye Zheng은 2011년 이전의 연구에서 보조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인 수단으로서의 재원이라는 의미가 강하였고, 정치인들로서는 국민 대다수의 사회안전망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함

○ 보조금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에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는 Nationally Designated Poverty Counties(NDPC) 지역, 즉 낙후지역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

9) Shuanglin Lin,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For Equity or For Growth?", *China's local public finance in transition*, Edited by Joyce Yanyun Man and Yu-Hung Hong, Lincoln Institute. 2011.

10) Li Zhang and Xinye Zheng, "The determinants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China's local public finance in transition*, Edited by Joyce Yanyun Man and Yu-Hung Hong, Lincoln Institute. 2011.

요한가에 대한 실증분석 자료가 요구되는 시점이었음

□ 2011년 이전에는 자료 접근성으로 인하여 주로 성단위(provincial level)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본 논문은 1997~2003년까지 County level로 이루어짐

○ 기존까지 지역 간 형평화 보조금 등 균형발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the transfer)이 지역 간 균형발전의 방식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세수반환제도는 잘 사는 지역에 보다 많이 가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면에서 형평화 보조금에 비하여 월등히 크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임

□ 실증분석의 주된 연구 주안점은 '세수반환제도'와 '형평화 보조금제도'의 비교에 있음

○ Tax rebate제도는 1994년 분세제 개혁(tax reform)으로 시작되었으며, 중앙정부 제도 개혁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임

○ 반면, 형평화 보조금의 경우 이와는 달리 농촌지역 혹은 가난한 지역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디자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형평화 보조금은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가난한 지역(poor areas)과 농촌지역(rural areas)으로의 배분효과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Ⅳ 중국의 지방정부 재정확충 방안 및 사례

1.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방안

□ 중국의 재산세 출현 배경[11)]

○ 중국의 지방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재산세 역시 토지가 국가의 소유이므로 재산과 토지에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여러 지방정부들이 세금 이외의 부분에서 수익을 찾기 시작하였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토지를 빌려주어 임대료를 받거나, 도로, 철도, 다리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려서 충당

○ 토지 임대료의 증가는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되었고, 토지 매매 혹은 임대를 바탕으로 한 많은 부패들이 일어남

□ (지방정부 재정확충) 지방정부의 토지임대료 비중 감소, 재정충당 방안 모색

○ 지방정부는 토지를 빌려주고 임대료로 재정을 충당했는데, 2010년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는 지방정부 총수입의 1/3을 차지했음

○ 2012년 중국지수협회(China Index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상해는 16%, 북경은 35.7%의 토지임대료가 급진적으로 감소했음[12)]

○ 결과적으로 토지임대료로 인한 수입은 안정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않아 지방정부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수입원을 찾게 됨

□ (중국의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기준 설정 및 세원파악이 필요)

○ 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평가된 '시장가치(Fair Value)'가 아닌 '자산원가'를 바탕으로 하는데, 부동산 가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산원가'를 바탕으로

11) Joyce Yanyun Man. China's Property Tax Reform: Progress and Challenge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12.
12) China Index Institute. 2012. http://www.chinanews.com/estate/2012/01-04/3580986.shtml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수손실에 해당함

○ 재산세에 '주택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집을 투기나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집값이 폭등해도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여 집값을 억제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현상이 벌어져 도시 주거지에 빈 집이 늘어났으나, 정작 주거목적의 집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은 집 장만에 어려움을 겪음

□ 현재 진행 중인 재산세 개정 모의실험

○ 2006년 6개의 도시가 '시가평가' 모의실험에 선택되었으며, 2007년에 10개의 도시로 확대됨

○ 2011년 상해시는 재산세 부과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만약 이미 한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해 거주자가 30평의 집을 추가적으로 구매했을 때, 18평을 제외한 나머지 12평으로만 과세표준을 측정하여 재산세(Personal Property Tax)를 부과하기 시작함

□ 향후 중국 지방정부가 재산세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조세회피 우려)지방정부는 재산세 부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고 기존의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를 임대해 주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할까 우려함

○ (과세인프라 구축 및 세무행정 개혁 필요)지방정부 공무원들은 토지임대료를 특별한 시가평가 없이 쉽게 조정하여 올려받을 수 있었는데 이에 비해 재산세는 CAMA(Computer Assisted Mass Appraisal)라는 시스템을 통해 시가를 평가받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복잡함 때문에 재산세 개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함

○ (정치적 저항감 극복) 부동산 투자자 및 투기업자들도 재산세 개정을 반대하는 등 재산세제도 정착을 위한 정치적인 어려움 존재

○ (관리가능한 조세제도 구축 방안) 과세표준, 공제기준, 관리자의 역할, 세율 평가방법이 대부분 미비한 상태이므로 필수요건에 대한 추가분석 필요

2. 중국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역정책

가. 광동성(廣東省) 사례분석

□ 광동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7가지 방안에 대하여 정리한 바 있음[13)]

1) 일반예산을 통한 자금조달
   - 일반 조세, 국가 소유 자산의 운영 수익, 행정 수수료, 벌금과 같은 기타 수입, 상위 정부로부터의 이전재원, 지난해로부터 이월된 자금

2) Extrabudgetary 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 사용 수수료 및 이용료: 고속도로, 상하수도 등의 서비스 이용료 등

3) 중앙정부로부터의 대출
   - 대출액의 규모가 정해지면 여러 정부부처들은 정책 우선순위와 중앙정부 관료들의 결정에 따라 특정액을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됨. 그 후 각 중앙부처들이 그 금액을 성(省)정부와 지방정부의 프로젝트에 배정함

4) 정부와 사업형 기금을 통한 자금조달
   - 서비스 기관이나 기업의 수입을 통해 자체조달, 서비스 기관이나 기업의 이익잉여금이나 이전재원, 토지사용권 임대를 통한 수익

5) 개인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조달
   - ①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기관이나 기업을 통해: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 기관이나 기업은 자신들의 매출을 담보로 개인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일부 사업(예: 상하수도)의 운영권을 개인사업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대출액을 상환할 수 있음

13) John L. Mikesell, Jun Ma, Alfred Tat-Kei Ho, and Meili Niu, "Financial local public infrastructure: Guangdong province", 「China's Local Public Finance in China」, Edited by Joyce Yanyun Man and Yu-Hung Hong,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11.

- ② 민간투자자나 사업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같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미래 수익을 통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음

6) 해외 투자를 통한 자체조달
- 일부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들은 해외기업에 의해 관리되고 자금이 조달되고 있음

7) 개인 기부와 국제기구 기금

나. 산동성의 사례 분석[14)]

□ 산동성의 Zouping county의 예: 지방재정 압박에 대한 '현'(縣, County) 정부 의 재원 마련을 위한 자구책으로서 토지임대 활용방안 소개

○ 2006년 농업세가 폐지되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많은 농촌지역의 세수가 줄어들었던 반면, Zouping county의 농업세는 원래 재정의 3.3%만을 차지하여 농업세 폐지로 인한 재정타격이 크지 않았음

○ 지방정부는 토지를 개발하고 임대하여 추가예산을 마련하였고, 토지은행을 설립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하였음

○ 또한, 토지개발 후 투자자 유치를 위해 토지임대료를 공제해 주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음

14) Susan Whiting, "Fiscal reform and land public finance: Zouping county in national context", *China's Local Public Finance in China*, Edited by Joyce Yanyun Man and Yu-Hung Hong,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11.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검토결과

□ 중국의 재정 및 정부간 재정의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에 앞서 중앙 지방간 재정관계 개선을 위한 목적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론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에 개입하는 이유는 '재분배'와 '재정안정성(Fiscal sustainability)'을 목적으로 할 때임

○ 최근 중국 재정당국은 중앙으로의 재정집권화를 위한 세원파악(부동산 관련 과표 양성화 의지 등) 및 채무수준에 대한 고려 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임

□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주요 역할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음

○ 중앙정부는 재정확보 차원에서 1994년 분세제 개혁을 통한 세원을 공유하였고,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각종 세제지원이나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

- 동시에 지역 간 경제력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여 낙후지역을 지원하였음

○ 지방정부는 이른바 주요 재정지출에 해당하는 교육, 복지, 환경, 산업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2. 중국 분권모형의 특징과 정책제언

□ Roy Bahl(2011)은 '분권을 통한 효율성 확보'란 선진국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체제전환중인 국가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개념이라고 설명한 바 있음[15)]

15) Roy Bahl,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local public finance: What is next on the reform agenda?", *China's Local Public Finance in China*, Edited by Joyce Yanyun Man and Yu-Hung Hong,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11.

□ (의사결정 합리화 - 정치적 선진화)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분권이론의 개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요구됨

○ 첫째, 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regional 혹은 local 단위의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의 요구를 들어줄 책임이 있어야 함. 즉, 선출직 단체장은 임명직보다는 보다 더 주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 둘째, 지방정부의 단체장(the chief officer)은 법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함.

○ 셋째, 기초단위의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과세권이 보장되어야 함

○ 넷째, 기초단위 정부에서는 세출의 수준과 비중을 정하는 적절한 협상력(adequate discretion power)이 있어야 함

○ 이상의 선결요건은 '분권을 통한 효율성(the efficiency gains from the fiscal decentralization)'이 제도정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주민이 상당한 비용을 치루고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함

□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선출직 단체장이 불가능한 중국의 경우, 이른바 선진국 사례를 근간으로 한 기존의 세출모형은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 중국의 정치적 특이성을 감안한 중국의 정부간 재정제도 개혁의 핵심과제는 '지방정부 세출규모 파악'과 '재정관리제도 개선'에 해당함

○ 우선,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정부 재정지출 관리가 가능한 구조를 갖는 것이 시급함

○ '사회복지지출'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 접근 필요: 연금, 의료, 의무교육, 치안 경제개발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 특히 기초단계('현(縣)' 이하) 정부에서의 공적부조 지출비중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전망과 중기계획 요망

○ 재정지출 및 채무관리제도: 지방정부 세출 책임이 현저히 높은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채무포함)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지방정부 부채발행 규모나 속도에 대한 규제가 필요

□ 중국의 세입부분 개선방향 및 논의사항은 비교적 명확한 단계로 판단됨

○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중앙정부의 재정역할 강화 필요: '세수반환' 규모 축소,

형평화 보조금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보와 보조금 정책 개편 필요

○ 현재 세제개혁의 주요 아젠다는 '재산세'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정기능 강화에 있음

□ 중국의 정부간 재정구조 개혁을 위하여 추가 분석 어젠다는 정치구조 및 재정, 경제제도에 대한 분야에 해당함

○ (정치구조) 중국 정치구조의 거버넌스 파악

○ (중앙 및 지방재정제도) 중국의 재정제도 및 예산제도를 통한 재정부의 역할 규명 및 주요 정책과 효과분석, 주요 제도와 정책내용 파악

○ (주요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 효과분석) 중국의 개혁개방은 도시화정책을 수단으로 이루어졌음. 인구이동을 통한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과 이에 따른 도시팽창과 지방재정지출 증가는 유기적인 내용으로서 중국 전반의 재정제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 중국 국가통계를 바탕으로 한 DB 분석을 통하여 정책효과를 계량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정부 단위 재정활동의 범위와 내용 파악) 중국의 재정은 지방재정과 분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세입과 세출 모두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정부간 재정관계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및 기대효과

○ 향후 중국의 분권모형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심화, 재정관리 취약성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력 약화 등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동북아 경제 및 G20 국가들에도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중국의 GDP 성장속도가 주춤하고 있으며, 환경문제와 지역 간 소득격차 등은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엔진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정작 경제성장 저하에 보다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은 소득수준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 부분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간 재정지출 파악 및 관리의 미진함은 중장기 재정계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체계와 재정관리 수준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이며, 다만, 중국의 재정규모가 커짐에 따라 나타나는 정부간 재정규모 증가추이와 재정지출 분담내용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김의섭, 「중국의 재정분권화와 중앙-지방 재정관계의 변화」,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1권, 2006.

이홍규 외, 「중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위탁정책연구 2011-62, 2011, pp. 129~160.

임성일, 「중국의 지방재정제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_____, 『중국의 재정과 조세제도(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정석규, 「중국 재정개혁의 핵심이슈와 개혁전망」, PEMNA센터 세미나 발표자료, 2013. 6. 19.

장노순·김화, 「중국 재정제도개혁의 변천과 발전과제 -분세제제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48집, 2009.

Ahmad, Singh, Lockwood, "Taxation Reforms and Changes in Revenue Assignments in China", *IMF Working Paper*, Fiscal Affairs Department, 2004: 7.

Bahl, Roy,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and local public finance: What is next on the reform agenda?", *China's Local Public Finance in China*, Edited by Joyce Yanyun Man and Yu-Hung Hong,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11.

Jorge Martinez-Vazquez, Baoyun Qian, Shuilin Wang and Heng-Fu Zou, "A Treaties on Public Finance in China", No 555 *CEMA Working Papers*, China Economics and Management Academy, Central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2012.

John L. Mikesell, Jun Ma, Alfred Tat-Kei Ho, and Meili Niu, "Financial local public infrastructure: Guangdong province", *China's Local Public Finance in China*, Edited by Joyce Yanyun Man and Yu-Hung Hong,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11.

Knight, John and Li Shi, "Fiscal Decentralization: Incentives, Redistribution and Reform in China," Oxford Development Studies 27(1):5-32, 1999.

Li Zhang and Xinye Zheng, "The determinants of intergovernmental transfer",

China's local public finance in transition, Edited by Joyce Yanyun Man and Yu-Hung Hong, Lincoln Institute, 2011.

Joyce Yanyun Man, "China's Property Tax Reform: Progress and Challenges",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12.

Shuanglin Lin. 2011. "Central Government Transfers: For Equity or For Growth?", *China's local public finance in transition*, Edited by Joyce Yanyun Man and Yu-Hung Hong, Lincoln Institute, 2011.

Susan Whiting, "Fiscal reform and land public finance: Zouping county in national context", *China's Local Public Finance in China*, Edited by Joyce Yanyun Man and Yu-Hung Hong,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2011.

Wong, Christine P.W., "Central-local Relations Revisited: The 1994 Tax-Sharing Reform and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in China", China Perspectives 31: 52-63, 2000.

Zhang, Zhihua and Jorge Martinez-Vazquez, "The system of Equalization Transfers in China", *Working Paper* 0312, International Studies Program, Georgia State University, 2003.

작성자 :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02-2186-2214)